

택배 노동자 투쟁 승리하라

관련 기사 3면



김민호 기자

국제

카자흐스탄 항쟁 국제 연대 성명 5면

카자흐스탄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러시아와 중국 5면

프랑스 교직원들, 코로나 안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 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취약성 드러낸
바이든 1면

4면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5년
돌아보기

6~7면

기후 운동
개혁주의
전략인가
사회주의
전략인가?

10~11면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9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8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 요구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12면

프랑스 교직원들, 코로나 안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

찰리 킴버

1월 13일 프랑스 전역의 학교 노동자 수십만 명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교원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노동자 75퍼센트, 중등학교 노동자 62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절반이, 파리에서는 학교 200곳이 문을 닫았다.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학교 파업이다. 학교들에서 벌어지는 “말도 못할 혼란”을 규탄하며 교육 부문 노동조합 11개 모두가 이번 파업에 참가했는데, 이는 유례가 드문 일이다.

파리에서 파업 시위에 참가한 마리는 이렇게 말했다.

“파업 분위기는 매우 힘차고 분노가 뜨겁습니다. [출근을 종용하는] 정부와 사장들을 뒷받침할 양육 시설로 만들려고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아이들의 건강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도 저희와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전후적입니다. 사람들이 노란 조끼 행진의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 파업, 이를 파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우리가 개별 학교로 돌아가서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커질 것입니다.”

파업 참가자와 지지자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100건 넘게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이 일부 학교를 봉쇄했고 경찰한테서 공격받는 일도 있었다. 파리에 있는 엘렌 부세 학교에서는 경찰 십여 명이 학생들에게 최루 가스를 뿌리고 쓰레기통을 쌓아 만든 바리케이드를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파업 전날 교육부 장관 장미셸 블랑케르는 교사들이 “바이러스에 대항해 파업한다”고 폄하해 교사들의 화를 돋웠다.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파리의 학생과 교사들

마르세유에서 7000명 규모의 행진에 참가한 교사 아가사는 이렇게 말했다.

“블랑케르는 우리가 그의 코로나 대응책을 규탄하며 파업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블랑케르의 발언은 우리의 결의만 더 높일 뿐입니다. 블랑케르야말로 우리가 맞서 싸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는 노동자 수를 더 줄이고, 마스크 지급이나 인원 제한 등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들에서 벌어진 파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프랑스 파업도 위험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울 힘이 학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에 있음을 보여 준다.

여러 지역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다음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가졌다. 의료 · 철도 노동자 등 행동을 벌이고 싶어 하는 다른 집단들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연대 · 단결 · 민주노조(SUD)는 다음 주에도 하루 파업을 벌이자고 다른 노동조합들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28만 명이 넘으며, 지난 주에만 프랑스 전체 인구의 2.5퍼센트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감염률이 더 높다. 파리 광역권에서는 지난주 초 · 중학생의 약 5퍼센트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17세의 경우에는 6퍼센트가 넘는다.

학교 노동자들은 모든 학교에 질 좋은 마스크를 제공하고 [환기가 필요하면 일람을 올리는] 이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해 왔다.

노동자들은 가을에 시행했던 방역 지침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급 폐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 블랑케르는 무모하게도 등교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1월 3일에 등교가 재개되자, 블랑케르는 서킷 브레이커 즉각 발동 규정을 없애고 확진자 3명 발생 시 학급을 격리하도록 했다.

프랑스 학부모연맹 FCPE도 파업을 지지했다. FCPE는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의 2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학교는 이미 수년간 유례없이 예산에 제약이 걸려 온 탓에 교육부가 내려보내는 각종 방역 지침을 더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도 방역 지침만 바꾸는 것을 더는 감수할 수 없다.”

이번 파업은 프랑스 공식 정치를 지배하는 우파 사상에 대한 반격의 징후 중 하나다.

올해 4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대통령인 자유 시장주의자 에마뉼 마크롱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그 뒤를 잇는 세 후보는 파시스트 마린 르펜, 보수당 후보 발레리 페크레스, 이슬람을 혐오하는 극우 에리크 제무르다.

하지만 이번 학교 파업과, 노조 경계를 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참가를 호소하는 1월 27일 합동 파업과 시위들은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7호 / 번역 오선희

방과후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지 않은 일부 학교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전면 등교와 돌봄교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개설 여부만 학교에 따라 다른 것에 항의하는 행동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일부 정규직 교사들은 전국 방과후학교강사지부의 개별 학교 정보 공개 요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섣불리 지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방과후학교로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고, 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개별 학교 정보 공개 요구보다는 교육청에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러나 먼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노동조건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를 향해 벌이는 동료 노동자들의 투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투쟁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전술이 더 효과적일지는 후호적으로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순서를 바꿔서, 효과적인 전술이냐 여부를 먼저 따져 지지와 연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방과후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전면 등교를 하고 돌봄교실이 열리는데도 방과후학교만 열리지 않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 확산이 걱정된다면,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하는 등 방

역을 강화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더구나 일부 정규직 교사들은 방과후강사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지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방과후학교를 학교 밖에서 진행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코로나는 구실일 뿐 처음부터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

교육청을 향한 생계비 지원 요구와 개별 학교를 향한 정보 공개 요구가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현재의 쥐꼬리만 한 생계비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다. 때문에 수업 재개 여부는 방과후강사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학교의 정보 공개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방과후강사들 탓이 아니다. 행정업무를 교사들에게 맡기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항의해야 할 문제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을 때, 우리가 어떤 선행적 기준을 정해 놓고 투쟁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지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파주의의 일종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먼저 투쟁을 지지하고 나서 생산적으로 전술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

장한빛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원

★ 독자편지와 답변 탈성장론,
어떻게 봐야 할까?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설 특수기 상경 투쟁에 들어가다

신정환

“이렇게 일하다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CJ대한통운이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왜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김충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성남지회 조합원)

파업 4주 차를 맞은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설 특수기인 1월 18일부터 무기한 상경 투쟁에 나섰다. 상경 첫날 노동자들은 CJ그룹 총수인 이재현에게 과로 방지 합의를 위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재현 자택 앞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강 다리 1인 시위, 서울 전역 지하철역 사 앞 홍보전 등을 진행했다.

같은 날 울산과 거제의 한진택배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CJ대한통운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집회에 함께했다.

정부의 묵인·방조

CJ대한통운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자신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사용자గా 아니라며 대리점과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택배노조가 1월 초 실시한 현장·설문 조사 결과에서 밝혔듯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도 절반 줄지 않고 있다. 사측이 분류 작업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요금 인상분의 60퍼센트 이상(노조 추산 연 3000억 원)을 자기 호주머니로 챙겨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3~4배나 증가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

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더구나 사측은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같은 과로사를 유발하는 계약안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여당의 묵인과 방조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는 외면하면서, 뒤늦게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연례적인 설 특수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조차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함께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사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고용노동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CJ대한통운이 사용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은근히 사측 편을 들어줬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우정사업본부)이 우체국에서 분류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는 않은 채,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 CJ대한통운 같은 민간기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려 하겠는가!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한 차례 농성장을 찾은 이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의 약속 위반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1월 18일 현재 파업이 22일째다. 노동자들은 굳건히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11명에서 시작한 노숙 단식농성은 100명으로 늘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설 특수기가 시작됐음에도 CJ대한통운의 물량은 평소보다 20~30퍼센트 줄었다. 파업 조합원 비중이 높은 경기 성남·광주, 울산, 경남 등지에선 타 택배사들이 CJ대한통운의 여파로 물량이 몰려 처리가 불가하다며 접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보통 설 연휴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30퍼센트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송 차질은 더 커질 수 있다. 노조가 설 특수기를 맞아 파업 조합원 상경 투쟁과 타 택배사에 물량 제한을 압박한 것은 효과를 내고 있다.

타 택배사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뚫리면 다른 쪽도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며 파업에 지지가 높다. CJ대한통운 파업에, 울산·거제 한진택배 파업과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배송 지연 투쟁도 시작됐다.

상경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서로를 반갑게 맞으며 투지를 밝혔다. 특히 집회 연단에서 연대 파업을 하고 상경한 울산과 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소개되자, 커다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은 파업 지지 여론도 높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 분들도 대부분 ‘CJ가 잘못하고 있다’며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이경숙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여수지회 사무부장)

물론, CJ대한통운 사측도 쉽게 양보하지 않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노조의 기를 꺾으려고 완강하게 나오고 있다. 경쟁이 격화하는 택배 시장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쥐어짜 수익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택배 산업을 코로나 시대에 성장하는 시장이라 보고 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그런 만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서울 주요 거점에서 규모 있게 집중 집회를 한다면 연대를 모으고 노동자들의 힘을 북돋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시민·사회·정치단체, 청년·학생 등의 연대도 넓어져야 한다.

코로나 시대 필수서비스를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 투쟁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자.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 임금 인상, 업무량 증가 반대 파업 돌입

울산과 거제 지역의 한진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도 1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CJ대한통운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의미도 있다.

김형주 전국택배노조 한진본부 거제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CJ대한통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밀리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과로사를 유발할] 부속합의서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싸우고 같이 끝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대리점 소장의 갑질에 고통받던 수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끔찍하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 파업의 여파로 거제 지역 한진택배 노동자들은 평소보다 2배 이

상으로 늘어난 물량에 치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인력을 총원하거나 적정 물량을 배송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사측은 들은 체 만 체하고 있다.

한편, 울산 지역 선암터미널 소속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낮은 수수료(임금)를 받아 왔다. 노동자들은 건당 880원인 수수료를 100원 인상하기를 바란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반쯤 처리 거부, 토요일 배송 거부 등의 투쟁을 벌여 왔다.

전국택배노조 한진본부 울산·거제지회 조합원들은 파업 첫날, CJ그룹 총수 이재현 자택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의 파업 상경 투쟁에 함께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청와대 농성과 배송 지연

청와대가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과 배송 지연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1월 17일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분류 인력 총원이 매우 미진한 상태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70~80퍼센트가량 총원됐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고, 분류 작업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분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임금(수수료)에 분류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며 회피한다.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분

류 인력이 총원된 곳에서는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삭감(또는 못 받게)되는 임금이 월 50만~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측은 지난해 9월 분류 작업 개선 명목으로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했으면서 말이다.

수차례 대화에도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투쟁에 나섰다.

윤종현 우체국본부장을 비롯한 15인은 1월 17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조합원들은 사측과 합의한 기본 물량(하루 190개)만큼만 배송한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설 특수기에 배송 물량이 급증하더라도 더 배송하지 않아, 배송 지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노동자와의 약속을 배신한 정부·사측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싸워서 승리하길 바란다.



CJ그룹 총수 이재현 집 앞 집회에 울산·거제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함께해 CJ대한통운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배경 사진

2월 9일부터 <노동자 연대> 신문이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제작됩니다

<노동자 연대>는 스마트폰 시대에 독자들의 신문 읽기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려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출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자 연대>는 현실 세계에서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매주 종이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종이 신문 제작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바꿔 제작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판형이 바뀌어도 정보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예리하고 차별성 있는 기사, (컬러 면 증등 면) 더 보기 좋은 디자인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디지털을 강화하면서도 종이 신문 독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려는 <노동자 연대>의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선거를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취약성 드러낸 바이든 1년

1월 20일은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흔히 많은 취임식이었다. 완전 무장한 주방 위군 2만 5000명이 투입돼, 1월 6일에 미국 극우가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것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취임은 커다란 희망을 불어넣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야심찬 경제 정책을 표방했다. 목표는 미국 경제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미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성공한다면 이로써 세 가지 위협에 대응할 것이었다: 기후 위기,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도전,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두드러지게 성장시킨 극우.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난맥상에 빠져 있다. 바이든의 정책안은 상·하원의 교착 상태에 발목 잡힐 듯하다. 2020년 선거로 민주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차로 다수당이 될 수 있었고, 상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덕에 민주당 상원의원 두 명이 이례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됐는데, 바로 웨스트버지니아주(州)의 조 맨친과 애리조나주의 키어스틴 시너마이다.

언론은 이 의원들을 “중도파”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념에 따라 서든 기회주의적으로 굴어서든, 이들은 공화당 내에서 성장하는 우파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이 미국 복지를 서유럽 수준에 더 가깝게 만들고자 한 “더 나은 재건” 법안의 내용을 삭감하도록 압박했다. 이후 맨친은 삭감된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서 바이든은 투표권 문제로 초점을 돌렸다. 앞서 공화당은 2020년 선거 패배에 대응해 모든 주에서 주의회를 동원해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더 많다) 가난한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

지만 투표권 문제에서도 바이든은 시너마와 맨친 때문에 위태로운 듯 보인다. 민주당은 [주의회보다 상위 기관인 연방의회 차원에서] 투표권을 보호하려는 바이든의 법안 2개가 공화당에 의해 저지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시너마와 맨친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보수 성향 판사들이 지배하는 연방대법원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의무화하려던 바이든의 시도에 6 대 3으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바이든으로서의 삼중고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위기를 완화하려던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도 나쁜 결과로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백악관의 한계와 자신의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 처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바이든의 취약함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커져 왔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카불 철군 당시 혼란상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했다. 여론조사 추이는 긍정 평가 43퍼센트 대 부정 평가 50퍼센트 부근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물가가 오르고 있다. 2021년 12월 물가 인상률은 7퍼센트에 이르렀는데,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공화당과, 맨친 같은 민주당 내 친공화당 인사들은 이를 바이든의 막대한 정부 지출 탓으로 돌린다. 역대 최대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것은 트럼프 정부였다는 사실은 무시하면서 말이다.

에드워드 루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지적을 했다. “오늘날 미국이 1970년대와 유사함을 이해하려고 꼭 50살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 정치적 난맥상, 범죄율 급등, 불길한 지정학적 상황이 겹치는 경우를 한 눈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보여 준다.” 루스는 바이든이 불운했던 민주당 대통령 지미 카터와 같은 말로를 겪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 카터는 1980년 대선 때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대패했다. 루스는 이렇게 경고한다. “미국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루스가 지적하듯, 숭배의 대상이 되는 미국의 1789년 헌법은 민주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지 1년 만에) 장악한 공화당이 오늘날 미국 정치를 추동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계획은 분명하다. 바이든의 계획을 사보타주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탈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2년 후 대권을 되찾아 트럼프와 유사하지만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돼 위험성도 더 클 정책들을 시행하려 들 것이다.

누가 그들을 저지할 수 있을까? 힐러리 클린턴은 아닐 것이다. 클린턴 지지자들은 2024년 대선 승리 가능성을 과대포장하려 들지만 말이다. 공화당·민주당 모두에 맞서는 진정한 좌파적 대안만이 극우의 전진에 맞서는 투쟁에 착수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8호 / 번역 김준효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workerssolidarity.org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카자흐스탄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먼 바스케터

지난주 러시아군 일부가 카자흐스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병력도 이달 말 철수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에 맞선 대규모 시위에 직면해 국가를 부지하려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격동 속에서 약 1만 명이 구급됐다. 연료비 급등으로 촉발된 시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64명이 살해됐다.

사실 명령을 내린 토카예프는 외국에서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들이 평화시위대를 선동해 카자흐스탄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토카예프 정부

의 내각 전원이 사임했다. 한편, 토카예프는 시위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를 록 집어 비난했다. 나자르바예프는 퇴임 후에도 “국민 지도자” 직함을 유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다.]

토카예프는 정부의 빈곤 대처 실패가 시위를 촉발한 요인의 하나임을 인정했다. 토카예프는 카자흐스탄 최대 기업들로 하여금 보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에 돈을 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카예프는 알리칸 스마일로프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스마일로프는 전임 정부의 제1부총리를 지낸 자다.

그러나 딱히 근본적 변화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발표에 이어 의미 있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나자르바예프는 올해 들어 종적이 묘연한데, 국외로 도피했다는니 죽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하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경쟁을 벌이는 곳의 하나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카자흐스탄과 그곳 정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는 러시아로부터 독립성을 일정 수준 얻어 내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조금 더 다가가려 했다.

나자르바예프 퇴임 후에도 그의 가문은 카자흐스탄의 부의 상당 부분을 계속 지배했으며, 나자르바예프 자신은 안보 기관에 대한 권한을 유지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전 세계 우라늄의 40퍼센트가 채굴되고,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량 5분의 1이 카자흐스탄산이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자 비트코인 채굴업자 상당수가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갔다. 나자르바예프 가문은 이 모든 것에서 자연히 득을 봤다.

그런데 이렇던 나자르바예프가 정부의 안보 직책에서 해임됐다.

카림 마시모프라는 자도 언급할 만

한 인물이다. 카자흐스탄 공식 정치의 화신인 그는 러시아연방보안국(KGB) 공작원 출신으로,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며 중국어를 배웠다.

마시모프는 카자흐스탄 정보국장이었고 총리를 지낸 적도 있었다. 현재 마시모프는 반역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을 재확립하려고 카자흐스탄에 개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개입이 영향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항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뤄졌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번 시위는 카자흐스탄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표현이다.

시위가 그토록 컸던 것은 권위주의 지배 체제 내에서 진정한 분노가 분출한 결과다. 2011년 14명이 목숨을 잃고 파업이 분쇄된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번에 처음 파업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 노동자들은 쿠데타를 획책하는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조종당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올리가르히 파벌들이 모두 이번 위기를 이용해 득을 보려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신장 지역의 억압받는 위구르인들에게 카자흐스탄 지배자들이 지나치게 동정적이라고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영향력을 키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지배층은 이웃 열강에 기대어 자기 배를 불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시위대는 대중이 스스로 변화를 성취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 항쟁이 서로 경쟁하는 열강과 부패하고 억압적인 지배자들의 손에 내맡겨져 버린다면 비극일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88호 / 번역 김준호



이번 항쟁은 카자흐스탄 정치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만을 보여 줬다. 시위대가 철거해 버린 카자흐스탄의 권력자 나자르바예프의 동상

카자흐스탄 항쟁 국제 연대 성명

1월 12일 세계 각국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카자흐스탄 항쟁에 연대를 표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항쟁 탄압, 러시아의 개입, 서방의 위선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에릭 투상(벨기에 리에주대학교, 파리 제8대학교, 국제주의 투사이자 저술가), 질 베르 아슈카르(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 대학(SOAS) 개발학 교수), 알렉스 캘리니코스(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등의 개인과,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NPA),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러시아의 '사회주의 경향' 등의 단체들이 여기에 연명했다. 한국의 노동자연대도 동참했다. 전체 서명자 명단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주의자, 노동조합 운동가, 인권 운동가, 반전 운동가와 단체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갖고 1월 2일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항쟁을 주시했다. 파업하는 석유 노동자들과 광원 노동자들, 시위 참가자들은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았다. 정권은 완전 무장한 경찰과 군대를 풀고 '경고 없이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위 참가자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8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우리는 이 항쟁을 “이슬람주의 과격파”나 미국 제국주의의 공작으로 매도하는 독재 정권의 선전을 배격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 민심을 잃은 독재 정권이 흔히 ‘외부’ 선동가를 탓하는 법이다.

오히려 항쟁을 촉발한 것은 연료 가

격 인상이었다. 석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와 끔찍한 가난·착취가 공존하는 카자흐스탄에서 연료 가격 인상은 분노를 폭발시킨 최후의 결정타였다. 이 항쟁은 병혹한 독재 정권이 인민을 무자비하게 억압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정권은 모든 야당을 해산하고, 노동조합 운동가들과 인권 운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다. 10년 전 자나오젠시(市)에서는 파업하는 석유 노동자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모든 자본주의 열강의 태도는 분명하다. 푸틴은 독재 정권을 전폭 지원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카자흐스탄으로 병력 3000명을 보내 시위대를 위협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도 카자흐스탄 정부 지지를 선언하고 소요가 “외세”

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당국과 시위대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의 촉구도 이와 비슷했다. 그 내용인즉 시위대는 “폭력 조장을 피하고” 당국은 “평화롭게 시위할 기본권을 존중하되 정당한 안보 이익을 방어할 때는 적절한 수준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라”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방 정부들은 카자흐스탄의 ‘안정’을 가장 바란다. 카자흐스탄에서 천연 자원을 갈취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득을 보는 자신들의 석유 기업들을 생각해서다.

자본주의 지배 체제들의 계급 연대에, 우리는 노동계급 연대로 응답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나 의회, 단체 등에서 다음의 요구들을 제기할 것이다.

- 독재에 맞서 들고일어난 카자흐스탄인들에 연대를!
- 시위대 탄압 중단하라!
- 모든 시위 참가자와 정치수를 석방하라!
- 러시아와 집단안보조약기구(는) 개입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 유럽연합과 미국은 대중의 저항과 정부의 잔혹한 탄압을 동급에 놓는 위선을 멈춰라!
- 독재 정권 물러나라!
- 석유 산업과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 통제하에 두라는 석유 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지를!
-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적인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건설되는 것에 지지를!

출처 카자흐스탄 연대 웹사이트 / 번역 이원웅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5년 돌아보기

김문성

이 글은 1월 1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발제자의 정리 부분은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

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주류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사면에 찬성했다. 이재명은 2016년 촛불집회 첫날부터 박근혜 퇴진 연설로 뜬 인물이고,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 변화를 바랐던 대중에게는 정치가 촛불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환멸감을 줬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은 광범한 대중의 반부패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그 운동의 등장에는 ① 총선 참패로 박근혜 정부의 권위 실추 ②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진해운 퇴출 등) 산업 구조조정이 촉발한 지배계급의 분열 ③ 그런 분열이 초래한 박근혜 부패의 폭로 ④ 박근혜가 추진한 노동 개악(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만들려던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로 불렀던)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이 작용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회복의 부진과 노동조건 악화,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대중의 누적된 불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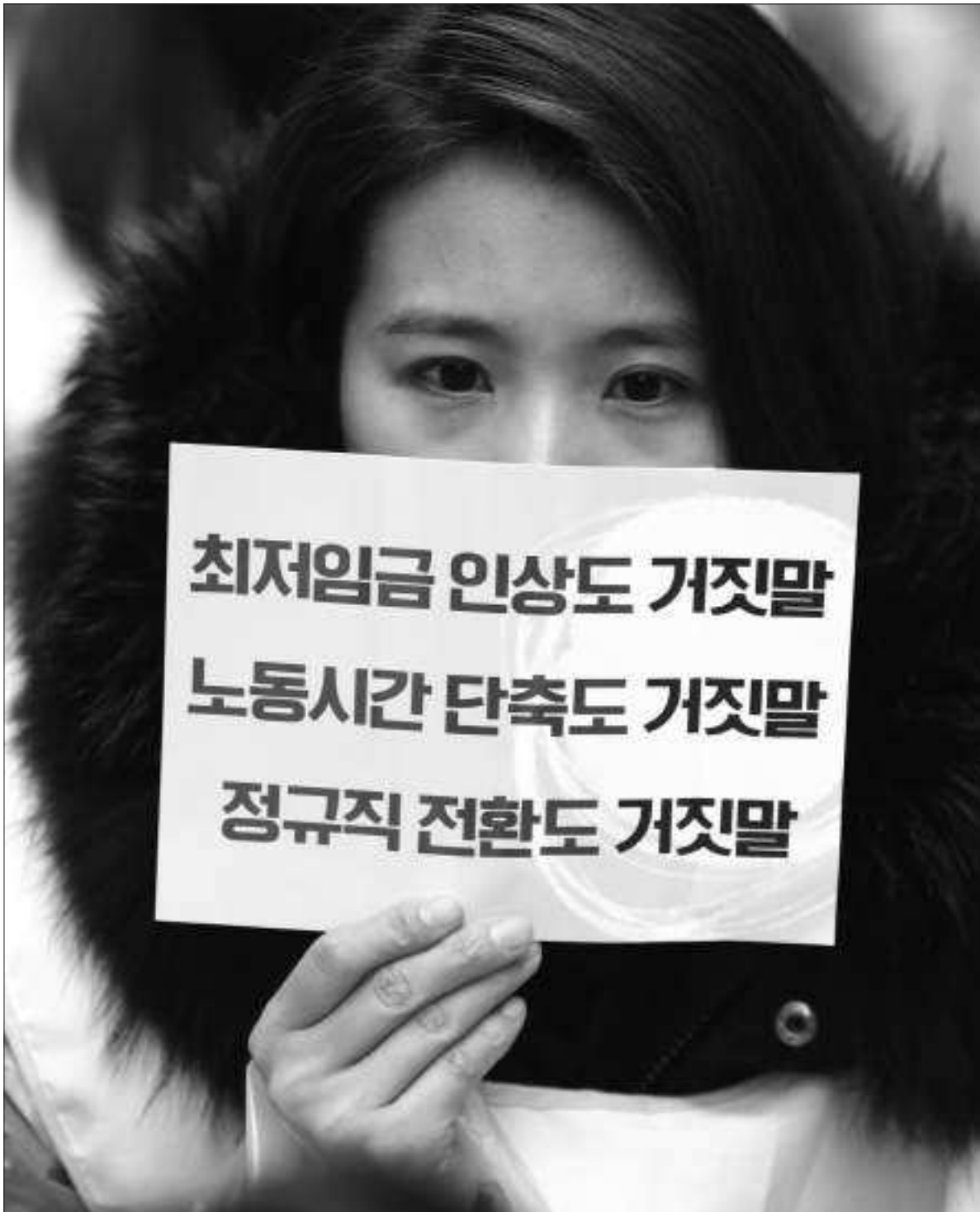
노동자투쟁 중에서도 특히 철도노조 파업이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방아쇠 구실을 했다. 10월 29일 첫 촛불집회의 중심 대열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었다. 당시 노동자연대 단체는 10월 29일 집회를 열어 박근혜 퇴진 투쟁을 개시하자고 한 첫 제안자였다. 또한 우리는 그 국면에서 철도 파업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철도노조의 전투적 활동가들과 협력해 파업이 지속되도록 애썼다.

촛불 운동은 2주 만에 서울 도심의 100만 명 집회로 도약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그 견인자였다. 운동이 확대되자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분열해 소속 의원 3분의 1이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해 버렸다.

그러는 동안 촛불 운동 내 개혁주의자들과 민주당은 3차례 시도 끝에 철도 파업을 중단시켰다. 운동의 헤게모니를 공식 정치 쪽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개혁 염원을 실현시키려는 온건한, 위로부터의 개혁주의가 운동의 헤게모니를 쥐게 됐다.

촛불 운동은 박근혜를 쫓아내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운동은 더한층의 급진화로 나아가기보다는 민주당 집권으로 수렴됐다. 이와 함께, 운동 내 개혁주의 세력도 지지 기반을 넓혔다. 정의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도)은 선거 득표 증가와 노조 가입 증가를 이뤘다. 진보당도 박근혜가 해산시킨 조직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건할 수 있었다.



2018년 11월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한국 잡월드 노동자

2.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개혁’의 성격

문재인은 촛불 운동 초기에 박근혜 퇴진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야 촛불 운동에 올라타 운동의 성과를 가로채고 집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고 정치적 양극화를 억제해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자본 축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에게는 작은 양보를 하면서 더 큰 노동

개약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수소차,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들에 투자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여기에 노동 유연화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규정까지 바꿔 이 재용을 사면해 줬고, 신산업 지원을 위해 대일 민족주의 정서도 활용했다.

이런 친기업 환경 조성은 지정학적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지배계급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오락가락하다가, 임기 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문재인은 이런 박근혜 정부 후반기 기조를 계승했다. 임기 첫날부터 사드 배치 공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보다 더 노골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매진했다. 국제 질서 불안정

과 세계적 경쟁 격화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고, F-35 같은 첨단 무기를 대량 구입했다. 역대 최대 국방비를 기록하며 군비를 대폭 강화해 한국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한 주역으로 발돋움했다.

문재인은 박근혜와 달리 남북한 간 평화를 강조했다. 해외투자 유치에 한반도 긴장이 리스크요인임을 강조하면서 말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평화운동가들은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탄압받았다.

이런 모순된 임무를 떠는 중도 정부는 좌우 모두에게 공격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마땅하다. 이 점에서 운동 내 개혁주의자들이 정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전반부 기간 동안 그들의 태도는 결정적으로 문제적이었다.(이 점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3. 문재인 ‘촛불 개혁’ 놀음의 실상

문재인의 줄타기가 성공하려면 개혁주의자들을 포섭해야 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운동의 개혁 의제를 수용해 사기극을 펼치고 노동운동 지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려고 했다.

지금 이것들 중 지켜진 약속은 거의 없다.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줬다 뺐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표적인 줬다 뺐기 공약이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 성장과 ‘노동존중’을 결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

제 성장을 지표가 악화되자 소득주도성장은 립서비스에서도 사라졌다.

② 줄 듯하며 약 올리다가 안 주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나 탈핵, 여성 차별 해소, 세월호 진상 규명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줄 듯, 줄 듯하다가 끝내 배신한 문제들이다. 가령 사법부가 낙태죄 폐지를 결정했는데도 그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돌봄에 대한 투자도 크게 미흡했고,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의 개선은 전혀 없었다. 최근의 안티페미니즘

백래시는 우파가 문재인이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펼치는 캠페인인데, 이것이 다소 반향을 얻은 이유다.

③ 대국민 사기극: 개혁이 아닌 것을 개혁인 것처럼 대중을 속인 것도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 개혁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이 가장 환멸을 느낀 것도 이 문제들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박근혜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 시장화를 가속시켰

다. 최근에 부동산 과열을 억제한다며 아예 노동자·서민층의 대출을 막아 버렸다.

문재인은 위기에 처할 때 반우파 정서를 자극하려고 ‘민주개혁’ 의제들을 꺼내들었다. 양승태 재판 거래, 기무사의 촛불 운동 무력 진압 검토 문건 폭로 등이 그런 사례였다. 그러나 전 기무사령관 자살 등 반발이 거세자 수사는 호지부지됐다. 이 호지부지된 수사의 총책임자가 윤석열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

명했다. 그러다 그와 사이가 틀어지자 이번엔 윤석열을 겨냥해 “역적 검찰을 때려잡자”며 검찰개혁을 강행했다. 이처럼 검찰개혁은 처음부터 사이비 민주개혁이었다. 남은 것은 ‘검찰2’ 공수처와 경찰 권한 강화뿐이다.

④ 민주개혁 빙자한 개악 시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개혁을 빙자해 개악도 시도했다. 역사왜곡금지법, 언론중재법 등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개악인데, 다행히 이 법들은 통과되지 않았다.

4. 우파의 회복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개혁 배신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위기를 겪고 있다.

두 번의 심각한 지지율 위기는 공교롭게도 선거 압승 후 찾아왔다. 그런 위기 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우파의 재기를 경고하며 노동운동 지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꺼내 놔다. 2018년 하반기 경사노위 출범, 2020년 코로나 극복 노사정 삼정 합의와 중대재해법 제정(협상) 등이 그런 경우였다.

그런 방법은 거듭될수록 실체가 드러나 힘을 잃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두 번이나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것이 광범한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

면서, 도리어 정치적으로는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고, 그에 반해 좌파 진영은 존재감을 점차 잃어 갔다.

사실 우파는 문재인 임기 초반에는 분열과 신뢰 실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이 누적되면서 회복의 계기를 잡았다. 우파는 개혁 배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개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혁 약속은 위선이었다. 그러므로 촛불에 참여했거나 지지한 것은 괜한 짓이었다(이용만 당한 것이다).’ 그렇게 사기가 저하된 대중의 일부를 공략해 반사이익을 얻었다. 조국 논란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그렇게 하기에 아주 유리한 소재였다. 앞서 언급

했듯이, 안티페미니즘 공세도 일부에게 먹힌다.

현재 지배계급 다수는 지연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길 기대하며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충분히 단결을 회복하지 못했음도 거둬 드러나고 있다. 자본가들은 윤석열이 문재인 실망층에게 땀시 있게 다가가 자기들의 어젠다를 설득하며 지지를 다시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 정권 교체 여론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지배계급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

당이 지배계급의 지지를 놓고 보수 세력의 눈치를 더욱 보게 만든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주노총 집회 탄압,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이재용·박근혜 사면 등의 우파와 보수적 경쟁을 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당 주류와 기반이 다소 달라서 개혁 염원층의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도 당선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좌우 줄타기,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비토 정서를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지층을 배신하거나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에는 우파를 유리하게 만드는 해로운 일이다.

5. 개혁주의의 부진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것에 더해 팬데믹, 경제 침체, 국제질서 불안정, 기후 등 복합 위기는 정치적 양극화를 좀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그림의 한 측면은 지배계급이 오른쪽으로 결집하는 것이다. 아직 충분치 않아도 말이다. 문제는 왼쪽이다. 결집의 구심이 강하지 않다. 오히려 민주노총, 진보당, 정의당 등 주요 좌파 스스로 이런 상황에 일조했다.

첫째, 포퓰리즘(계급 간 협력) 전략 문제.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은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로 규정하고, 대략 2020년까지 협력 노선을 유지했다. 그 결과, 개혁을 얻는 데도 실패했고, 그들 자신은 점점 주변화됐다. 우파의 귀환을 막겠다며 번번이 정부 편을 들었다가 개혁 위선의 일부나 동조자(“민주당 2중대”)로 비쳐져 손해를 봤다. 조국과 윤미향 두둔 또는 침묵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으로 선거법 개혁을 이뤄 2020년 총선에서 도약하겠다는 계산했던 것도 민주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무산됐다.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되지 못했다 2019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민주노총을 찾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둘째, 온건한 개혁주의 문제. 경제와 안보가 모두 불안정한 복합 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 관료를 비롯한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좌파적 대안보다는 오히려 양극화를 봉합하고 체제를 구하고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큰 듯하다. 특히 2018년의 구조조정 국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초반에 이런 점이 두드러졌다.

셋째, 뒤늦고 부족한 차별화.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은 2021년부터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차별화

를 늘려 오긴 했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지지하고 건설한다는 면에서의 차별화가 진정으로 중요하네, 이 점이 부족하다. 또 뒤늦었다. 진작에 그런 실천을 했어야 대선에서 좌파의 존재감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인의 개혁을 기대하며 기다리거나 개혁에 맞선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탓에 대중의 사기는 떨어지고 수동화됐다. 위로부터 제공되는 개혁을 중시할수록 상식과 여

론, 당선 가능성 같은 실용주의적 가치가 중시되고, 반면 기층 노동자들의 자체 행동과 좌파는 주변화된다.

복합 위기의 심도가 깊은 데다, 주류 정치인들도 지도력을 보여 주지 못하며 오락가락하므로, 정치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 몇 달 새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 선두 뒤바뀐이 몇 차례나 일어났다. 청년층으로 가면 이런 변동성이 더 심하다. 대선 전망도 불투명하다.

발제자의 정리

박근혜 사면에 관한 민주당 측의 책략적 계산은 부차적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사면을 “국민 통합”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박근혜의 계속된 구속은 국민 분열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그 분열은 나쁜 분열인가? 아니다. 박근혜 사면은 국민의힘과는 경쟁하는 목적의 것이지만, 지배계급 전반을 향해서는 화해 제스처다.

촛불 운동은 무용했는가? 촛불 운동은 수십 년 만에 대중운동이 부패한 정권을 바꾼 승리한 운동이다. 운동의 성과와 운동이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 또 이전으로 도로 돌아간 것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 가령 박근혜가 사면됐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대체로 운동의 성과는 노동계급 대중의 의식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노동계급의 자체 조직화와 행동 수준이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득표 성장, 민주노총(한국노총도) 노조로의 가입 증가는 계속됐다. 지난해 노조 가입률은 25년 만에 최고치였다. 진보당도(노조 안팎에서) 성장했다. 정의당은 최근 위기이지만, 전반적 추세가 그렇진 않은 듯하다. 최근에는 스타벅스처럼 노조 바깥에서도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행동이 있다. ‘불편한 용기’가 이끈 불법촬영 항의 운동도 기존의 조직된 운동 바깥에서 벌어져, 서민층 청년 여성이 많이 참가한 대중투쟁이었다.

그러나 이런 전진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겠다는 온건한 개혁주의 노동조합 관료들의 주도성 아래 이뤄졌다. 정당 득표나 노조 가입 증가에 비하면, 의식과 행동 면에서의 급진화는 더뎠다. 운동에서 드러난 변화 염원과 운동의 결과물이 같지 않았다. 이것이 촛불의 모순된 성과였다.

노동운동의 대표적 조직들(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은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등치시켰다. 탄핵당한 우파로부터 문재인을 방어하고 그와 협력해 위로부터 개혁을 얻겠다는 온건·실용 노선이 판을 쳤다.

운동을 보편화하려는 노력, 즉 각 부문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켜 정치화하는 게 중요했지만, 개혁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대화”, 입법 로비, 의석 늘리기(선거제 개혁이나 위성정당 참여) 등 의회적 수단에 몰두했다.

노조 지도자들과 다수 좌파가 그 방향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과 기꺼이 협력하려고 그런 전략에 반대한 혁명적 좌파를 배척했고, 급진좌파 일부도 민주노총 관료들을 추수했다.

개방적이고 연대 확대 지향적으로 운동을 건설해도 모자랄 판에 좌파가 급진 페미니즘의 분열적 행태를 이용하며 경쟁심을 고무해 문제를 악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점점 주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려는 조급함에 급진좌파의 다수가 선거주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중 행동이 있어야 상황이 바뀌는데, 그런 운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당장은 그저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 수준이어도 그런 노력들이 꾸준히 누적된 효과와 어떤 객관적 계기가 만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 좌파는 올바른 분석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며 인내심을 갖고 개입해야 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촛불 초기에 박근혜 퇴진 운동을 개시하자자는 제안과 촛불 운동의 초기 견인자였던 철도노조 파업 사이에 매개체로서 노동자연대가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경험에서 미래를 위한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6. 결론

5년 전 촛불 운동을 떠올리면 현재 대선 판도와 좌파 세력의 약화된 존재감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노동운동은 미래를 위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노동조합주의를 극복해, 폭넓은 대중이 참여하는 급진적인 운동과 계급투쟁에 주안점을 뒀야 한다. 운동의 정치적 표현체가 등장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에 기대어 노동자 대중이 정치적으로 수동적 상태로 머문다면, 개혁을 쟁취할 수 없다. 지금 같은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는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좌파적이고 급진적인 대중 행동만이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경제나 안보 상태를 보면, 진보적 포퓰리즘 전략(민중주의)

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계급 모순을 얼버무리고 흐리려 하다가는 모순을 겪고 실패할 뿐이다. 조합주의(경제주의와 부문주의)를 극복하고 전 계급적인 정치적 투쟁이 전개돼야 노동조합 관료들의 민중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려면 혁명가들이 혁명적 조직을 확장해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었다. 그는 2018년 공론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본문은 인터뷰 전체를 읽기 쉽게 구성한 것이다.



대중운동 제주 영리병원 취소는 아래로부터 운동의 성과였다

지금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중국] 녹지그룹 측이 낸 소송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019년 4월에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주에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소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소송이에요. 2018년 12월 [당시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제주 영리병원을 허가해 줄 때 여론과 운동의 압력에 밀려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죠. 이 소송은 1심에 계류돼 있어요.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결판이 났으니, 이제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이 다시 시작됐겠죠.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리병원 저지]에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직접적 효과로 이제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에서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심각한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이 판결로 인해서 당장 영리병원이 설립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해 말 녹지그룹 측은 병원 지분의 80퍼센트를 [우리들병원 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다이나서울에 넘겼어요. 다이나서울은 이 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죠.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 잘될 리 없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애초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크지 않았거든요. 녹지그룹은 청문회에서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는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추진하게 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제주도 측이 녹지그룹더러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보면 녹지그룹이 여기에 얼마나 투자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녹지그룹 측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재판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을 톡톡히 받을 수 있겠죠. 또 이번 소송의 녹지병원 측 대리인이 법무법인 태평양인데, 이들은 FTA 등의 투자자국가분쟁조정(ISDS)에 특화된 곳이에요. 태평양이 이번 사건을 ISDS를 활용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속셈도 있는 듯해요.

무엇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자신감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판결로 제주도에서도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거의 20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다져 온 게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반대 여론은 지금도 무시 못할 만큼 높고요.

판결의 배경

영리병원이 취소된 것은 운동의 성과였어요.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어기고 조건부로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강행하자 한겨울에 촛불 운동이 시작됐어요. 원희룡은 '조건부 허가'라면 대중 넘어갈 수 있다고 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심지어 원희룡 탄핵 투표(도지사 소환운동)를 하자는 여론이 50퍼센트가 넘었어요. 또, 제2공항 반대 운동도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부랴부랴 영리병원을 취소한 것이죠.

당시는 박근혜 탄핵 운동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던 때였죠. '적폐 청산'이 의제로 올라와 있었고요. 영리병원은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에 추진했던 적폐 중 하나였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약과 달리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사실상 협조해 왔습니다. 공론조사에서 국토부(당시 장관 김현미)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리병원 찬성 측으로 활동했구요(녹지병원은 불참). 보건복지부(당시 장관 박능후)는 2017년에는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2018년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난] 지금은 대중운동의 수준이 다르죠. 우파 윤석열이 우세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재명도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민의 여론과 운동과 (그리고 제주도 지방정부의) 영향을 더 받는다면, 고등법원부터는 이런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의 운동이 이를 강제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원희룡 자신이 애초 조건부 허가라는 이상한 행정명령으로 녹지그룹 측이 파고들 틈을 만들어 준 것도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5개월간 진행된 도민들의 공론화 결과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제주도가 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심지어 이번 재판에서 반대 운동 측이 [녹지그룹에 맞서] 제주도를

돕겠다고도 했는데, 제주도는 1심부터 딱 거절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여론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에요. 반대 운동은 녹지그룹 측의 한국 내 파트너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국내 자본이] 이렇게 손잡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또, 제주도에도 활동가 조직들이 있고 승리의 경험도 있고 대중운동의 뿌리가 여전히 있어요.

전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장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개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불씨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에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어요. 기재부가 그렇고 병원 자본과 재벌들도 병원의 규제 완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20년 가까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어요.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노골적으로 그럴 겁니다. 현재 원희룡은 윤석열 선대본부의 정책본부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얼마 전 <연합뉴스>가 녹지그룹이 병원 지분의 80퍼센트를 다이나서울에 넘겼더라도 녹지그룹이 이걸 다시 임대해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시나리오를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현실에서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영리병원 추진을 밀어붙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스와 철도에서도 야금야금 그렇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맞아 '이참에 잘됐다'며 '디지털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원격의료나 건강보험 개인정보의 민영화, E-러닝 같은 것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판결을 봐도 그렇고, 의료 민영화 반대(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정미 성지현

	개설 허가	개설 불허	판단 유보
1차 조사 (3012명)	20.5	39.5	40.1
2차 조사 (도민참여단)	27.7	56.5	15.8
3차 조사 (도민참여단)	38.9	58.9	2.2

※ 2018년 7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3개월 넘게 걸린 여론조사와 16시간이 넘는 200명의 도민참여단 토론 진행
※ 최종 조사 영리병원 불허 58.9% 허가 38.9%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영리병원 속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코로나19 전담병원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임금과 조건 개선 약속 받고 업무 복귀

지난해 12월 임금체계·직제 개편을 요구하며 2주일 넘게 파업을 벌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2월 31일 파업을 종료했다.

<매일노동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의료원 측은 2022년 상반기 내에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임금에서 차별을 받던 야간전담 공무원직의 경우 1분기 내에 해당 직종 정규직의 초임 직급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폭증하던 12월에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들은 코로나 병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투쟁을

비난했다.

그러나 확진자 폭증은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임이 너무 분명했다. 게다가 군산의료원 측은 노동자들이 팬데믹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서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악용해 2021년부터 임금체계와 직제를 개편하기로 한 단협까지 무시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

이 파업에 나선 것이었다.

결국 의료원 측은 임금체계·직제 개편 약속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히 파업하자 의료원 측과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등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저임금에 시달

리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최전선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여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노동자들은 의료원 측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실제 이행까지 이어지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장호중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환상이 크게 일었다. 6년가량 흐른 지금, 당시 유행한 주장들이 상당히 과장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을 따라잡거나 뛰어넘을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꽤나 유행했다. 좌파들 내에서도 유행에 편승하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관련 주장을 비판한 기사: '알파고와 환원론', 최일봉, <노동자 연대> 170호)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년 내 개발될 것이라던 기술들도 여전히 난항에 부딪혀 있다.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다. 당시 구글, GM,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2019~2021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기업주들은 운송에서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거라 전망하며 막대한 투자를 했다. 이에 따라 운전수들이 대량으로 실직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최근 실직한 사람들은 자율주행 전도사로 불렸던 CEO들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의 CEO나 GM 자회사 크루즈의 CEO는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우버도 2020년 말에 자율주행차 사업을 매각했다.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계속 미뤄지며 손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사기에 가까워서 독일 법원은 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초에도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대형 트럭을 인식하지 못해 자동차가 트럭의 바퀴 사이로 파고들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처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고, 실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콜센터 직원을 대신하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 AI 의사와 간호사, 컴퓨터가 분석해 주는 자산 관리와 법률 조언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은 AI와 로봇의 발전에 따라 2025년까지 1800만 명이 고용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취업자의 70퍼센트, 단순 노무직의 90퍼센트가 영향을 받는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인간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못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 중 절반가량이 고객 지원과 응대 부분에서 이를 활용했고(예컨대 고객 상담 챗봇), 향후 도입하겠다는 기업들도 이 부분이 가장 많았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중에 트럭으로 돌진한 테슬라의 차

그러나 챗봇은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 외에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상담사와 통화해야 해서 그 연결을 수십 분 동안 기다리며 율화통이 터져 본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AI 기술로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던 산업 부문 중에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며 오히려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곳도 많다. 콜센터, 택배, 운송, 의료 등에서 인력 부족으로 기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고통받고 있다.

AI의 가을?

얼마 전부터는 AI 기술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온다.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에 'AI의 가을'이 오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미 1950년대와 1980년대에 AI 붐이 일었다가 기술 개발이 정체되고 환상이 깨지며 투자가 축소되는 일이 있었다. 세 번째인 이번 AI 붐은 2012년에 시작했다. 그런데 양질의 데이터 부족, 하드웨어 발전의 정체와 함께 '알고리즘 개발로 지능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까지 제기되면서 AI 기술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코노미스트>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AI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미·중 패권 갈등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AI는 그중 하나이다. AI는 신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군사

력 강화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 지원을 늘리고,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과 시키며 AI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시민들의 얼굴 정보 1억 7000만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넘긴 일도 있었다.

그러나 AI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던 주장은 과장임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기업 이윤율은 몇 년 전보다도 떨어졌고, 기업 투자, 생산성 향상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기업들의 AI 도입 증가 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윤율이 낮은 상황은 기술 발전과 도입을 제약하기도 한다.) 한국 개발연구원이 2021년 1월에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 기업의 3.6퍼센트만 AI 기술을 도입했다.

물론 신기술 개발로 신산업에서 우위를 점한 일부 자본가는 추가적 이윤을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신기술에 투자 붐이 벌어지는 일은 자본주의에서 반복돼 왔다. 그러나 기업 간 경쟁으로 산업 전반에서 기계 등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체제 전체의 이윤율을 전보다 더 끌어내리는 모순된 효과를 낸다.

AI 산업은 기술 발전이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이기능커녕 자본 축적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준다.

두려움 부추기기

비록 AI 기술로 노동이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 부분 과장됐

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들은 기술 발전과 로봇 등 기계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노동자 고용 비용을 줄이려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기술 발전과 기계 도입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용 감소와 노동 강도 강화 공격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생산이 핵심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의존한다는 근본 특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투쟁할 잠재력이 있다. 오히려 로봇과 첨단 기술이 많이 도입돼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파업으로 이윤에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늘어난다.

적지 않은 좌파들도 AI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에 동조하며,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받아들인다. 이런 전망 탓에 인력 감축이나 노동 강도 강화, 노동 유연화 같은

공격에 제대로 맞서기 힘들다는 비판주의에 빠지고,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강조하거나 일부 노조 지도자들처럼 지레 양보 교섭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AI 기술 발전의 효과를 과장하고, 두려움을 부추기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며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기술 발전은 인류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로봇으로 힘겨운 노동 일부를 대신하고, 여가를 늘려 창조 활동의 기회를 키울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사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토론해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혁신 기술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실업의 우려 키우기,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기계로 인한 "모순과 적대는 기계 자체가 아니라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으로부터 나온다".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가 생산의 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때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고도의 생산 능력은 비로소 다수의 필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영

추천 소책자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56쪽, 4,000원

구입문의
전화: 02-2271-2395
이메일 : mail@workerssolidarity.org

기후 운동

개혁주의 전략인가 사회주의 전략인가?

지난해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성과 없이 끝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이대로 기후 위기가 재앙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면 기후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마틴 엠슨**이 살펴본다. 마틴 엠슨은 영국의 환경 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로, 지난해 총회가 열린 영국 현지에서 항의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의 책 《기후변화: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COP26 —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공저)은 한국에서도 출간됐다.

극소수 갑부와 그들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지난해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활동가들 사이에서 기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총회가 그토록 알맹이 없이 끝나면서 운동 안에서는 중요한 물음들이 제기된다. 기후 정의를 쟁취하고 환경 재앙이 닥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조직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에 맞서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관통하고 있기도 하다.

활동가들만 이런 주제로 씨름 중인 것은 아니다. [1976년부터 발행되는 학술지] 《환경 · 자원 연간 리뷰》 최신호에서는 기후 과학자 23명이 30년간 이어진 유엔 당사국 총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를 다뤘다.

틴들 기후변화 연구소의 케빈 앤더슨을 포함한 이 과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아주 인상적이고,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배적인 경제적 · 정치적 이해관

계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변화를 막으려고 적극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또한 경제적 · 지정학적 분열이라는 더 커다란 맥락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 체계적 부정의역사도 그런 맥락의 일부다.”

그리고 이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은 “[인류의] 진보’에 대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들을 전면으로 끄집어낸다. 거의 무비판적인 경제 성장 추구, 임시방편의 정치, 편협하고 기술 · 경제주의적인 합리성이 이 패러다임의 본질적 특징이다.” 또한 “이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세계관과 관점은 여태껏 주변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반대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은 흔히 “유리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화석연료 산업보다 훨씬 더 광범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더 구조적인 데 있고, [이런 문제의 해결책들은] “기존 질서를 약간 손본 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과학자들은 또 다음과 같이 썼다. “진정한 의미에서 결정적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방향을 택하든, 미래는 현재와 급격하게 단절될 것이다.”

사회는 기존 질서와 “양립 불가능한 방식과 규모로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근본적으로 줄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현 체제의 “안정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능히 뛰어넘을 혼란과 충격이 기후변화로 초래”될 것이다.

이 논문이 의미심장한 것은, 환경 과학자들이 점점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방향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환경 운동은 이런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 정의와 기후 정의는 하나다”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항의 시위에 참가한 영국의 청소 노동자들

어떤 “체제 변화” 전략인가?

지난 10년 동안 환경 운동 안에서 반(反)자본주의는 강력한 요소였고 그 영향력이 커져 왔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가 널리 퍼진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 구호는 2009년 COP 회담장 밖에서 처음 울려 퍼졌고 이후 세계 곳곳 기후 시위에서 현수막과 팻말로 꾸준히 등장했다.

하지만 체제 변화가 무슨 뜻이고 이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물음이 많다. 현재 기후 운동에서 주되게 제시되는 전략은 여전히 “개혁주의”다. 여기서 개혁주의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체제로 고쳐 쓰려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전략하에서도 엄청난 수의 나무 심기, 방대한 지역의 재야생화,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구상들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

상들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갈수록 많이 배출하는 경제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간 경쟁 때문에 모든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종속된다. 그런데 개혁주의 전략들은 이런 자본 축적의 논리와 단절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전략들의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생태 위기들과 사회적 불의를 초래한 식민주의 유산이나 오늘날의 제국주의 문제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유관을 폭파하는 방법”

운동 내 소수는 [체제를 바꾸는 문제에서] 이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해 낸다. 안드레아스 말름은 널리 읽힌 도발적인 저서 《송유관을 폭파하는 방법》에서 화석연료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중적 · 전투적 · 폭력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을 단열하라’[단열 주택의 보급을 요구하는 운동 단체 등의 다른 단체들은 소수 활동가들의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도시의 일부나 기업 활동 등을] 마비시키려 한다. 예컨대, 도로 점거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두 운동 경향은 여러 방식으로 서로 맞닿아 있다.

말름은 기후변화 대응의 진전을 막아 온 정부들과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또 자본주의가 생태 재앙을 일으키고 그 핵심부에서 화석연료 산업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이 체제의 본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렇듯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기존의 운동이 COP26 등의 회담에서 충분한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전투적 행동의 필요성을 느낀다. ‘멸종 반란’의 대규모 동원도 그랬

고, 규모는 훨씬 작지만 최근 ‘영국을 단열하라’의 행동도 그런 사례다.

운동이 비폭력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말름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는 ‘멸종 반란’ 지도부 등 운동 내 일부가 비폭력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든다고 비판하는데, 옳은 지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사회 운동들이 어떻게 변화를 쟁취했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노예제 폐지 투쟁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체제에 맞선 투쟁, 시민권과 보통 선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등에서는 비폭력 대중 행동뿐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폭력적 공격도 함께 벌어질 때가 많았다고 말름은 지적한다. 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 폭력을 거り낌없이 휘두르는 세력들과 대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말름은, 이 체제의

화석연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유재산을 겨냥한 공격을 늘려 화석연료 산업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그는 《송유관을 폭파하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운동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화석연료 — 엠슨 전면 금지를 천명하고 강제 집행하는 것이다. 신규 이산화탄소 배출 장치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라.

“그것들을 못 쓰게 만들고, 산산조각내고, 파괴하고, 불사르고, 폭파시켜야 한다. 지구를 계속 불태우는 일에 투자하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휴지조각이 될 것임을 알게 하라 … 설령 정부의 금지 명령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몸과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wspaper.org/subs2



이미지 출처



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장호중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지역 도심에서 여러 차례 추모식과 집회를 해 왔다.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조처들은 당장 시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및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 선정, ▲의사에게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 부여, ▲피해보상심의회에 피해자 또는 가족 입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내용 공개, ▲미부검 사례에 대한 보상 심의,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

접종 방침 철회, ▲백신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해부터 알려져 왔다. 정부에게서 외면당한 환자와 (유)가족은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코로나 백신의 중증 부작용 발생 비율이 다른 백신보다 크게 높지는 않아도 아동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나 접종하다 보니 부작용 발생 건수 자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질 병 관 리 청 발 표 를 보 면, 2022년 1월 13일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1230명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 다른 부작용으로 신고됐다가 사망한 사람도 447명

이나 된다. 사망을 포함해 정부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분류한 부작용도 1만 5884건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 중 백신 접종 때문에 생긴 부작용으로 인정받은(인과성 인정)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가 애당초 인과성 인정 범위를 매우 좁게 정해 뒀기 때문이다. 인과성을 입증받지 못할 경우 매우 제한적인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던 호언장담은 완전 허풍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면서도 그에 따른 정부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기업에는 더 많이 퍼 주지 못해 안달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한다.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의

료진이 부작용 가능성을 의심한 환자도 결국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백신 개발 기간이 매우 짧았고 백신을 사용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넘은 것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전문가들조차 인과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장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과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른 선진국 정부들이 인

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처럼 인과성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과성 입증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의심 신고만으로도 치료비, 생계비, 손실 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놔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애당초 인과성 판단의 기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하나 마나 한 소리다. 그 취지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필요하다고 해, 피해자 지원보다 접종률을 앞세우는 정부

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여권의 이런 태도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가장 먼저 백신 피해자 보상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은 분향소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연출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원인 홍석준은 특별법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더 나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저 선거용 이미지 공세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이 발의한 특별법도 정작 인과성 판단의 구체적 조건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당이 집권 시절 세월호 희생자이나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취했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더 중시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조차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는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허술한 누더기 법안인데도 말이다. 윤석열의 백신 공약을 발표한 원희룡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온 자다.

심상정 후보만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백신 정책은 국민의힘에게 거둬 기회를 주고 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계기로 본

위구르 — 중국의 인권 문제?

1월 27일(목)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노동자연대) 기자 (미국주요언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

참가신청 bit.ly/meeting0127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북악재 우동브점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2335, 010-4909-2026(박지혜)

카카오톡 ID: 오픈채팅 '노동자연대온라인토론회'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하고, 신장위구르 생신증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위구르가 중국의 '인권 문제'라며 압박하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합니다. 미·중 갈등의 첨예한 위구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위구르인들은 어떤 처지인지, 왜 중국은 위구르족을 억압하며 그들의 해방을 어떻게 가능할지 살펴보려 합니다.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유익한 좌파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TV를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주말 pick)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말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채널 바로가기

노동자연대 TV의 새 코너

시사/이슈 토크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봐야 할까?
-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불평등, 백신패스 논란
- ...